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응 투쟁 교육지

2024년 8월 6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www.nodong.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응 투쟁에 나서자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차별 없는 피해자 지원!! 아리셀 대표이사 구속 수사!!
-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 화학사고 안전 대책 강화, 이주노동자 실질 안전 대책 마련
- 50인(억)미만 사업장,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하라!!



“그냥 착하게 산 죄 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에 나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깝고 억울 합니다... (故 강 순복님 유족)

“이제 전 배상금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 딸이 죽은 이유를, 제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선 안 됩니다.

(故 비에리메님 유족 BBC 인터뷰 기사)

“제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훌륭한 직원이었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옆 동료가 어떻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일단 죽었으니 대충 해결하면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사람의 진심과 정성을 짓밟은 아리셀의 죄를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故 김병철님 유족)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6월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연속적인 폭발음과 천도가 넘는 화마에 휩싸여 23명의 노동자가 죽고, 8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입니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가짜 50인 미만 사업장 방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윤석열 정부 불법파견 감독 70%감소**

실제로는 100명이 넘게 일하면서도, 아리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2023년까지 유예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했고, 근본 원인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연간 1,582건 불법파견 감독은 계속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 이후 2022년 489개, 2023년 465개로 70%가 감소했고, 결국 23명의 아리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장도급 불법파견 대책은 거부하고, 오로지 화재 안전 대책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연장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결국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위험의 이주화 !!!
이주 노동자 안전 無대책으로
매년 이주노동자 100명 사망
진상규명도 피해자 지원도 차별

매년 사고 사망이 800명 내외인데, 그중 100명이 이주 노동자 사망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고, 언어와 문화차이라는 이중 삼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입국 시 포괄적인 안전교육만 있을 뿐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위험경보조차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100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죽어나갔지만, 사고조사나 대책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아리셀 참사를 통해 이주 노동자 산재사망 시 체류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는 커녕 사고조사 경과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어 나갈 때까지, 기업도 정부도 차별적인 피해자 유족 지원과 보상으로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뽑아내던 기업의 탐욕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리튬 배터리 수 차례 위험경고
맹탕 감독 정부 무대책
기업과 정부가 참사 공범

수년 동안 군납용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가 100여 건에 달하고, 아리셀은 군납용을 포함한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고위험 사업장이지만, 수년간 단 한 번의 정부 감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4건의 폭발 화재 사고, 최소한의 비상구, 적정한 소화기나 소화설비, 보관 시 안전 조치 등 그 어느 하나 법이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감독은커녕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단돈 3만 원 때문에 안전 컨설팅을 중단한 아리셀은 중대재해 법률 대응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하고 대표이사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전지산업은 1차 전지산업조차도 열폭주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거나, 폭발 화재 발생 시 전용 소화기조차 없고 대책이 없는 폭탄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생산하는 노동자, 소비하는 시민 모두가 위험천만인 리튬 배터리는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맹탕 감독과 전지 산업 안전 무대책인 정부는 아리셀 참사의 공범입니다.

아리셀 피해자 유족들은 싸우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아리셀 참사 대응투쟁 8월17일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참사 발생 당일 참사 현장을 찾아간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피해자 유족들, 시민사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추모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참사 30일 7월 23일에는 아리셀과 정부를 규탄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열렸고, 전국의 노동청에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아리셀 참사 대응 투쟁은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 제조업 산단에 만연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 화학사고 대책, 50인(억)미만 사업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 이주노동자 유족 체류 지원이 8월 31일까지만 연장되어, 아리셀은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화재 안전 대책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아리셀 참사 8월 집중 투쟁을 전개합니다.

2024년 8월 17일(토)

13:30 아리셀 화재 현장 (추모행동)

15:00 화성시청 추모행진과 추모문화제

참가 문의 : 한창수 010-9787-9903

황철우 010-3481-2640

김소연 010-6317-3460

함께 계좌 :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신문광고 : bit.ly/817아리셀희망버스

*지역별 참가버스 안내는 추후 공지합니다.

